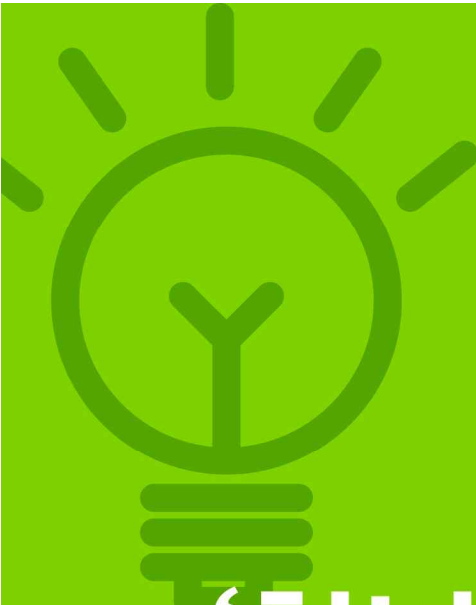




정책토론회

‘청년 Free 공약’ 제안

| 일 시 | 2017년 4월 27일(목) 오전 10시

| 장 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청년이여는미래

■ 순 서 ■

■ 사 회

- 박 주 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 주제토론

- 이 상 협 (전국청년창업가연합회 사무총장)
- 김 동 근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대표)
- 민 지 식 (취업준비생)
- 백 경 훈 (청년이여는미래 대표)
- 조 창 덕 (성남시 거주 대학생)
- 김 순 옥 (청년이만드는세상 공동대표)

■ 질의·응답

■ 폐 회



■————— 목 차 —————■

■ 주 제 토 론

[규제 FREE]

새로운 시장을 막아선 규제	07
- 이 상 협 (전국청년창업가연합회 사무총장)	

4차 산업과 창업을 막아선 규제	13
- 김 동 근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대표)	

[스펙 FREE]

스펙준비·취업준비생 이야기	25
- 민 지 식 (취업준비생)	

부모, 학벌, 제도에 따른 불공정 채용시스템	27
- 백 경 훈 (청년이여는미래 대표)	

[수당 FREE]

청년수당·배당 사례자 이야기	35
- 조 창 덕 (성남시 거주 대학생)	

청년수당·출산수당 등 대선주자별 수당 공약	37
- 김 순 옥 (청년이만드는세상 공동대표)	



새로운 시장을 막아선 규제

이 상 협

전국청년창업가연합회 사무총장

(사)청년창업가협회 창업규제특위 위원장

[서설(序說)]

고용, 실업 등 일자리 전반의 경제 문제에 따른 사회 환경의 변화와 함께 도래한 4차 산업혁명의 초입에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과 함께 창업·창직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도가 증가하고 현장에서도 청년창업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기존의 규제시스템은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차세대 산업의 신기술과 산업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청년창업가에게 진입 장벽 등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Start-up 및 기창업가가 직면한 불합리한 규제 발굴, Positive 규제 개선의 현장 목소리가 수렴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공약과 시스템 보완 병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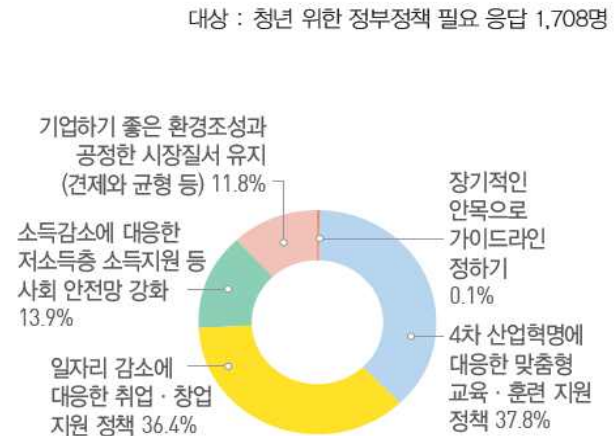
[4차 산업혁명 실태조사]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청년들을 위한 정부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85.4%가 그렇다고 답변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맞춤형 교육·훈련 지원정책’(37.8%), ‘일자리 감소에 대응한 취업·창업 지원정책’(36.4%) 등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2-2-13]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정부정책 필요성



[그림 2-2-14]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2016.12.2~5(4일간) 전국 만 19~34세 청년 2,000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주)마크로밀 엠브레인 의뢰진행

[규제 인식도]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규제 등 애로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도 조사 결과 예비·초기 청년창업가의 규제인식도는 전반적으로 높지 않으나 실제 창업하여 사업을 영위할수록 규제 인식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창업 애로사항 인식도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16.4.7 ~ 4.30
- 조사대상 : 전국대학생창업동아리연합(NEST), 대학창업보육센터 청년입주기업, 창업사이트 회원 등 (618명 유효응답)
- 수행방법 : 온라인 조사, 현장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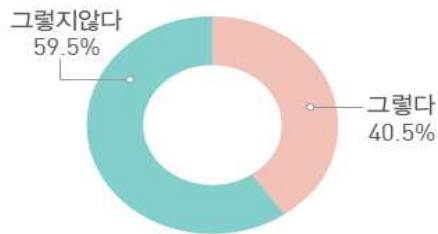
[표 2-1-9]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경험

응답내용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그렇다	154	24.9	75	23.5	79	26.4
그렇지 않다	162	26.2	51	16.0	111	37.1
잘 모르겠다	302	48.9	193	60.5	109	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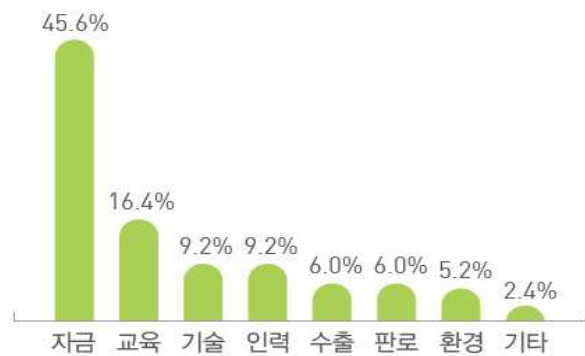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청년창업가의 비율은 24.9%로, 예비창업가(23.5%)보다 실제창업가(26.4%)가 높게 나타났으나 그 비율의 차이는 근소하다.

주요 규제 유형으로는 스타트업에 불리한 규제(53.3%), 기술 동향 및 사업유형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18.8%),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규제(3.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1-21] 정부 지원사업 참여 여부



[그림 2-1-22]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지원경험 분야



많은 청년창업가들이 정부 지원을 희망(85.8%)하고 있으나, 실제 지원받은 비율은 희망자의 절반에 못 미치는(40.5%)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분야는 자금(45.6%), 교육(16.4%), 기술(9.2%), 인력(9.2%) 등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규제 유형 및 개선 방안]



*청년 창업 애로발굴 프로젝트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청년창업가협회 '16.02~05)

I. 스타트업에 불리한 규제

① 사례 : 법인계좌 개설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나, 법인계좌를 사전 보유해야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

→ 신규 창업법인의 실제 사업영위 확인 후 계좌 개설 or 증빙서류 제출 없이 소액거래계좌 개설 (개선완료-금감원)

② 사례 : 공공조달 입찰 시, 공장등록 증빙 요구

→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요건 중 공장등록 요건 완화 제언 (기재부)

③ 사례 : 개인이 게임심의 신청 시 사업자 등록증 요구

→ 개인자격으로도 게임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게임 심의 등록 요건 간소화 제언 (문체부)

④ 사례 : 정부사업 신청 시 정부 기관별 상이한 서식

→ 기간별/사업별 신청양식 단일화 및 서류 간소화 제언 (유관부처)

II. 최근 기술·동향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

① 사례 :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 사항이 불명확하여 빅데이터 활용에 수동적

→ 법률간 유사·중복규제 해소 및 비식별 정보 활용근거 마련 (추진 중-금융위)

② 사례 : 비식별 위치정보 수집 시에도 개인의 동의 요구 및 통신사업자격을 갖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별도의 허가 요구

→ 개인식별성이 없는 사물위치정보에 한해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추진 중-미래부)

③ 사례 : 의료관련법 및 개인정보법에 의해 헬스케어 스타트업들의 의료정보 취급 금지

→ 의료정보의 비식별화기준 마련·배포 (추진 중-미래부)

④ 사례 : 개발자의 산업수학능력 판별 불가로 인력채용에 어려움
→ 산업수학 온라인 종합지원창구 개설 등 개방형 산업수학 플랫폼 가동 (추진 중-미래부)

⑤ 사례 : 모바일 게임의 섯다운제 적용 유예('17.5.17 종료)
→ 모바일 섯다운제 폐지 또는 유예기간 연장 제언 (여가부)

Ⅲ. 국내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① 사례 : 국내지도 해외 반출 금지
→ 안전장치 마련 후 해외 제공 방안 검토 제언 (국토부)

② 사례 : 국내 위치기반 사업자에 대한 점검 집중
→ 국내외 기업 동일하게 완화된 관리감독 실시 제언 (미래부)

Ⅳ. 정부지원사업 관련 규제

① 사례 : 정부사업 심사 시 전문성이 부족한 심사위원으로 인하여 명확한 시장성 평가나 사업성 평가 불가
→ 최신 산업의 동향과 사업 유형별 전문가를 심사위원 위촉 제언 (유관부처)

② 사례 : 지원금 집행기간(1년)에 따른 소모적 기간 운영
→ 육성자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사업비 집행기간 기준 완화 제언 (유관부처)

청년의 눈으로 본 4차산업 창업 공약

김 동 근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대표

서론

4차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바이오, 나노, 사물인터넷, 분야를 비롯한 미래산업분야에서의 기술 혁신을 뜻한다. 이러한 4차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인류는 기존의 가장 큰 변혁을 가져온 역사적 사건들을 압도하는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특히 노동분야에서의 충격이 예상되는데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2020년까지 총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총 510만여개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며 토머스 프레이는 2030년까지 총 20억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비율로 보면 현존하는 일자리의 80%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산업발달에 따라 도태되어 사라진 일자리만큼 새로운 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탄생한다는 주장은 이번에는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모든 일자리 정책은 현재 일은 인간이 하며,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얻는다는 현재의 패러다임을 전제로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기 시작하여 이 기본개념이 무너지기 시작한 이상 앞으로는 어떤 정책을 쓰든 다 일시적인 성과일 뿐 일자리는 앞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사라질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의미없는 숫자만 남을 것이다. 앞으로 그 어떤 후보가 어떤 장밋빛 일자리공약을 내든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실업자가 될 수 밖에 없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 모두가 ‘고용’이라는 개념만 머릿속에서 지운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훨씬 큰 풍요가 눈 앞에 펼쳐진다. 4차산업혁명으로 발생할 대량실업사태는 지금껏 재화를 분배하는 주된 방법인 ‘고용’이라는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일 뿐 오히려

생산성과 재화는 지금보다 훨씬 증가하게 될 것이기에 분배 시스템에 몇가지 패러다임 전환과 이에 기반한 개혁이 가능하다면 미래의 전망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제 인간이 노동을 해서 소득을 창출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노동을 서서히 분리하여 인공지능에게 넘겨주고 이를 잘 분배하여 인간은 누리기만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소득이 보장된 실업은 실업이 아니라 노동해방이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은 먹지도, 자지도, 쉬지도 않으며, 교육도, 연수도, 사내갈등도, 도덕적 해이도 없으며, 능률은 인간을 훨씬 뛰어넘고, 또한 그 능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생산된 재화의 양과 질도 계속 높아 질 것이다. 따라서 기술적 진보와 경제발전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지 않는 이상 현재 일자리를 늘이겠다는 정책이나 공약은 단기적으로만 성립가능할 뿐 장기적으로는 의미없다. 지금부터 일자리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고, 이에 따라 정부의 성공을 측정하는 평가기준, 통계, 지표에서 '일자리창출'을 지우고 '소득증대'로 바꿔나가야 한다. 목적인 소득이 확보되면 수단인 일자리는 의미없다.

앞서 제시한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유사 이래 인류를 옳아매던 고된 노동과 산재위험, 여가시간 부족, 실업의 공포를 비롯한 고통의 질곡에서 벗어나 노동해방, 경제적해방, 그리고 시간혁명을 실현할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공포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 그러나 인류의 풍요는 단순히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노동해방이 이루어지면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단순노동에 소비되고 있던 전 노동자의 '시간'이다. 미래에 노동에서 해방된 인류는 이 거대한 시간자원을 얻게 되는데, 이를 단순 노동이 아닌 자아실현과 진리 탐구, 유대 및 교류에 사용할 수 있다. 게다가 과도기 이후에는 의학의 발전으로 젊고 건강한 육체로 원하는 만큼의 수명증가, 이 긴 기간동안 축적되는 경험과 지혜, 호모로보틱스로의 진화를 통한 두뇌 자체의 역량 증가, 텍스트나 언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생각과 경험을 그대로 전달하는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 인공지능의 도움을 바탕으로 한 업무 효율 증가까지 고려하면 얼마나 큰 가치와 효용이 창출될 지 상상할 수도 없다. 이것이 4차산업혁명 도래에 바르게 적응한 미래의 비전이라고 생각한다.

4차산업혁명관련 대선공약 보기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직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스마트코리아 구현을 위한 민관 협력 구축 등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 전기차, 자율주행차, 신재생 에너지, 인공지능, 3D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심기술분야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국가 조성을 위해 스타트업 공공부분 조달 참여를 보장하고, 의무 구매비율을 확대한다. 또 정부가 중소기업과 혁신창업기업의 구매자가 되고 마케팅 대행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 정부의 창업지원펀드, 모태펀드, 엔젤 매칭펀드 등 지원자금을 확대할 계획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017년중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2018년 출범한다. 창업국가 조성 관련 법률 개정은 2017년부터 추진하며, 정책자금 확대는 2018년 예산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편성한다.

▲ 국민의당 안철수

교육혁명을 통한 창의교육 실현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를 설립하며 4차산업혁명시대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하고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학제 개편을 추진한다.

과학기술혁명과 창업혁명을 위해 정부 주도의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벗어나 민간 주도로 전환하겠다. 4차 산업혁명 인재 10만명 양성을 추진하고 국가R&D가 창업기업과 중소기업R&D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연구개발체제를 전면적으로 혁신, 연구개발과제 기획·선정·관리·평가업무를 일원화하겠다. 또 노후한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해 규제없는 창업드림랜드(스타트업 특구)를 조성한다.

창의적인 융합기술생태계 구축을 위해 '제조업+4차산업혁명'으로 국내 제조업 부흥을 도모하고 민관공동 연구 국가 기술융합센터를 설립한다. 자율주행차 핵심 부품 개발 및 융합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고, 인공지능·가상현실·사물인터넷 등 신성

장 산업을 육성하겠다.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연계, 제조 로봇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 자유한국당 홍준표

4차 산업 혁명 선도를 위한 '정보과학기술부'를 신설하고 4차 산업 육성을 위해 5년간 20조원 창업 투자펀드를 조성하겠다. ICT메카 글로벌 투자허브 국가 육성을 위해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한 프론트 대한민국 모델을 개발하고 인공지능 활용 대국민 서비스 확대 및 교육을 실시한다. 제4차산업혁명 등 국가 핵심과제의 전략적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미래전략위원회, 청년고용촉진위원회 등을 설치한다.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지능형 학습 지원시스템을 개발해 개별 학생들의 능력에 따른 1대1 맞춤형 학습과 쌍방향 학습을 지원하겠다.

▲ 바른정당 유승민

중소기업 혁신 인큐베이터로 신제품 제작 센터인 '메이커스랩'을 조성하겠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제조업 스마트 공장 설립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메이커스랩 및 지원정책은 2018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예산을 활용하며, 메이커랩은 수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협의에 따라 지원비율을 정하며, 기존 공간을 주로 활용할 계획이다.

게임, 소프트웨어 등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산업 위주로 부서를 개편하고 규제를 줄이기 위해 노력.

4차산업혁명 관련 부처 대수술

'판교-광교-동탄' 융복합 스마트 혁신벨트를 조성과 일산·포천·남양주 등을 비롯한 경기도 곳곳에 미래형 기술개발 및 플랫폼도시를 구축하는 정책도 발표했다. 더불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융복합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약속

▲ 정의당 심상정

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에너지저장장치 등 미래산업 분야, 태양광·풍력·스마트 그리드 등 재생 에너지산업 인프라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미래산업 분야 연구개발에 정부투자 지원을 하겠다.

제조업 재부흥전략으로 첨단제조업화와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추진한다. 인공지능과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신설하고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미래부·교육부·대학·기업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융합교육(STEM)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추진한다.

또 대통령 직속 ‘지능정보사회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규제프리존 추진 중단 및 재벌 특혜 중심의 ICT진흥정책 개선, 녹색경제·환경생태산업과 4차산업혁명을 결합을 추진하겠다. 과학기술정책의 혁신을 위해 과학기술계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정책 반영이 보장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 기초원천연구 개발 비중 확대, 자유공모형 상향식 연구비 비중 확대 등을 추진한다.

공약일반

공약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 컨트롤타워구축 - 4차산업혁명위원회, 정보과학기술부 등 담당기관을 만들겠다.
- 투자 및 지원 - 펀드, 기금, 예산을 만들어 지원하겠다.
- 교육개편 - 4차산업혁명에 맞춰 창의 융복합위주로 교육개편하겠다.
- 인재육성 - 어떤인재를 몇명 육성하겠다.
- 특구조성 - 어디를 허브, 혁신도시로 만들겠다.
- 업무일원화 - 파편화 되어 관리가 안되는 업무들을 일원화하겠다.
- 기관설립 - 기술융합센터, 메이커스랩 등 기관 설립하겠다.
- 산업육성 - 전기자동차, 태양광 등 4차산업혁명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겠다.

경제를 발전시키겠다 라는 말에 반대할 사람 없는 것처럼 4차산업혁명에 준비하고 적응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할 사람 없다. 마찬가지로 경제혁신위원회 만들겠다, 경제활성화기금 조성하겠다. 경제특화인재 육성하겠다, 경제특구 지정하겠다, 경제관련 업무 일원화하겠다, 경제담당기관 설립하겠다, 신산업 육성하겠다 정도의 공약또한 반대할 사람 없을 것이다. 공약을 평가하려면 우선순위, 예산, 시기, 인사, 수치적 언급 등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 현재 나와있는 공약 중 교육부 폐지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으며 당연히 육성하고, 당연히 발전되어야 할 것들을 메이커스랩이니 창업드림랜드니 하는 참신한 워딩 추가하여 나열한 것이 대부분이기에 대부분 옳고 실현되어 나쁠 항목도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내용, 그리고 본인의 예상과 달리 정부주도냐 민간주도냐 식의 이념성논란의 여지도 액면상 내용으로는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후보별 분석기준

그럼에도 부족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대한 분석하기 위해 몇가지 기준을 만들어 평가해보고자 한다.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은 □ 인공지능에 비중을 얼마나 두었는지 □ 구체성 □ 타당성 이렇게 3가지이다. 원래 예산타당성 등 추가해야 할 항목이 많지만 다른 항목은 정보가 없어 판단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3가지만 두기로 했다. 기준항목을 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인공지능에 비중을 얼마나 두었는가

원래 공약에 분량을 누가 정해둔 것이 아니기에 4차산업혁명 분야별 산업육성공약을 할 때 인공지능, 유전공학, 나노, 바이오, 사물인터넷,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드론, 3d프린터, 빅데이터, 로봇 전부 나열한다음에 이것들 다 육성하겠다 하는 식으로 말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같은 미래산업이라도 그 비중이 각기 다르다. 본인은 상기 열거한 항목 중 ‘인공지능’이 다른 모든 미래산업분야를 모두 합한 것을 압도하는 비중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다른 항목은 지금까지 인류 산업의 발전이 모두 그러했듯 의지를 실현하는 ‘수단의 발전’인데 반해 인공지능의 발전은 인류역사상 처음있는 ‘의지자체의 발전’이기 때문이다. 생각해보자. 통신의 발전은 ‘내 생각을 타인에게 전하고 싶다’ 라는 의지를 실현

하기 위해 점토판 -> 펜 -> 인쇄 -> 인터넷 -> 스마트폰 순서로 발전해왔다.

‘내가 저 사람을 죽이고 싶다’ 라는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돌도끼 -> 활 -> 총 -> 자동화기 순으로 발전해왔다. 철학, 과학 등 정신문명의 발전도 마찬가지이다. 의지를 가진 인간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놓은 것이 축적되고, 소통되며 발전하는 것이지, 그것을 생각하는 지능자체가 발전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발전은 처음으로 그 지능자체, 의지자체의 역량이 발전하는 일이다.

□ 구체성

항목에 구체적으로 들어갈수록 밀천이 드러나게 되고 감수해야 할 반론도 많아진다. 그런 리스크를 감수한 만큼 인정해 주어야 한다.

□ 타당성

물론 구체적이어도 타당성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후보별 분석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가장 일반적이고 균형있다고 생각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스마트코리아 구현을 위한 민관 협력구축, 핵심기술분야 적극지원

->당연하고 타당하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다.

스타트업 기업 공공조달 참여보장 및 의무 구매비율 확대, 정부가 혁신창업기업의 구매자 및 마케팅 대행사 역할 수행, 창업지원펀드 확대

-> 해당 항목을 두고 정부주도냐 민간주도냐 논란이 있을 법한데, 이정도 정부지원공약은 좌우 이념 상관없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현재에도 있다. 따라서 예산기준이 나와야 정부개입이 과도한지 여부를 알 수 있다. 개인적으로 후보 성향을 지레짐작 한다면 과도할 것으로 예상되긴 하나 일어나지 않은 일로 비판 할 수

없다. 시장질서 해치지 않는 범위라면 당연하고 타당하다.

□ 국민의당 안철수

교육혁명을 통한 창의교육 실현으로 교육부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 설립, 4차산업혁명 시대 문제해결 능력 향상하고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학제개편 추진한다.

->소위 간을 본다는 조롱섞인 이미지에 맞지 않게 찬반을 떠나 교육부 폐지라는 과감한 공약을 던진 용기를 인정하고 싶다. 교육부가 통제의 수단으로만 변질된다며 폐지하겠다는데 제시한 대안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권한 집중으로 얻던 이득을 상실하게 되는 반대급부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다른 해명이 없어 판단이 불가능하다.

과학기술혁명과 창업혁명을 위해 정부주도의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벗어나 민간주도로 전환, 4차산업인재 10만양성, 국가 R&D가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R&D지원. 국가연구개발체제 전면혁신, 연구개발과제 기획선정관리평가 일원화, 노후한 산업단지 리모델링 하여 규제없는 창업드림랜드 조성.

-> 정부주도가 옳다, 민간주도가 옳다라고 일반화 할 수 없다. 정부주도가 필요한 곳은 정부주도로, 민간주도가 필요한 곳은 민간주도로 해야 한다. 안철수후보가 문재인후보에게 정부주도위주라고 비판한 적이 있는데, 그 비판은 상기 4차산업혁명관련 공약을 두고 비판한 것이 아니라 공공일자리 131만개 만들겠다는 공약에 가한 비판이다. 해당 비판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문재인후보의 공약은 정부주도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는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다.

새로운 무엇을 하겠다는 것 만큼 현재 있는 규제를 철폐하는 것도 중요하며 잘 짚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안후보는 교육개혁에 초점을 맞춘다고 했는데, 일단 공약은 그에 맞게 나온 것 같고, 구체성이 없어 판단이 불가능하다. 안후보는 약력 등을 근거로 4차산업혁명에 대한 이해가 가장 높은 것으로 인식되던데, 명성에

비해 4차산업혁명에 대해 포괄적으로 짚고있지 못하는 것 같고, 인공지능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 자유한국당 홍준표

4차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정보과학기술부를 신설하고 4차산업 육성을 위해 5년간 20조원 창업투자펀드를 조성하겠다.

-> 정보과학기술부 신설은 위원회 설치보다 더 규모가 크다. 4차산업혁명이라고 무조건 크게,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겠으나 그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본인은 상당히 후하게 여지를 남기고 싶다. 위원회보다 부처가 더 크고, 많은 역량을 가질 것이니 더 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 개편보다 신설이 나은지는 고려해봐야 한다. 이는 박대통령의 이미지를 지우려는 정치적 계산도 있을 것인데,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으나 예산아낀다고 국민여론에 반해버리면 사회갈등비용, 홍보비용 등 간접적 비용을 결국 발생시킨다. 무엇이 나은지는 생각해볼 일이다.

5년간 20조원 창업투자펀드 조성도 전례없는 스케일이다. 4차산업혁명의 중요성이 많이 부각됐으나 청년일자리문제 보다는 아직 영향력이 적게 느껴지는데, MB 때 만든 청년창업재단, 박대통령의 청년희망재단이 각각 3000억, 1200억 규모인 것을 감안할 때 거의 100배에 이르는 공약이다. 예산만 놓고보면 4대강 급인데, 중요성은 확실히 인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얼마나 필요한 곳에 잘 쓰이느냐가 문제이다. 4차산업이랍시고 만들어놓고 인공지능이나 로봇공학같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태양광이나 무늬만 4차산업혁명 씌우고 곧 사라질 일자리 방어하는데 큰 비중이 쓰인다면 유명무실할 것이다. 일단 액수가 커서 시원하고 좋다.

ICT 메카 글로벌 투자허브 국가 육성을 위해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한 프론트 대한민국 모델을 개발하고, 인공지능 활용 대국민 서비스 확대 및 교육을 실시한다. 제 4차산업혁명 등 국가 핵심과제의 전략적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청년고용촉진위원회 등을 설치한다.

-> 프론트 대한민국 모델은 모델을 봐야 알것 같고, 인공지능을 특정하여 언급한 것은 놀라운데, 핀트가 약간 빗나간 것 같아 아쉽다. 대국민 서비스 확대 및 교육이 무엇인지는 나와봐야 알것 같다. 다만 인공지능 연구 개발이 서비스확대나 교육보다는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나와있는 인공지능 기술정도로 대국민 서비스확대나 교육을 시킬만한 콘텐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대통령 직속 청년고용촉진위원회는 상기 부처신설 건과 마찬가지로 현존하는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와의 정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겠는데, 현재 청년위에서 추진하는 일과 어떻게 다른지는 들어봐야 알 것 같다. 오히려 청년문제는 고용, 교육, 창업, 결혼 등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고용만 특화한 이름의 위원회로 대체하는 것은 더 퇴화한다는 생각이 들고, 대체가 아니라 따로 또 신설하는 거라면 청년 자 달고 있는 위원회가 두개 인 것도 부적절 하고 생각한다. 기존의 청년위원회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느낌이다. 쉽게 그냥 청년일자리 문제 심각하니까 청년고용위원회 만들자! 하고 단순하게 생각한 느낌이다. 문후보도 그렇고 어떤 아젠다 나오면 그 아젠다 맡는 위원회 신설하겠다 라는 것은 사실 평가할 필요도 없다. 너무나 타당하고 당연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니까.

□ 바른정당 유승민

중소기업 혁신 인큐베이터 신제품 제작 센터인 메이커스 랩을 조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제조업 스마트 공장 설립지원 확대. 스타트업 지원확대.

-> 국가규모의 공약이 부족한 것 같다. 기업지원도 스타트업, 벤처, 중소기업들을 하나하나 지원하겠다는 식의 공약인데 혁신성은 없어보인다. 미래산업은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거대자본과 플랫폼 선점한 대기업과 경쟁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중소기업이나 올망졸망한 스타트업 지원도 당연히 필요하나 이는 청년자립정도가 목적이니 세계속에서 글로벌 대기업과 경쟁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찾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 네트워크 효과는 현재 온라인에서 이제 오프라인 제조업까지 확대 될 것이다. 거대자본으로 인공지능 설비를 구축한 대기업과 경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임, 소프트웨어 등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산업 위주로 부서를 개편하고 규제를 줄이기 위해 노력. 4차산업혁명 관련 부서 대수술 해야.

-> 현실성 있고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게임규제를 언급한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게임은 영화산업에 2배에 이르는 거대한 시장이고 우리나라가 일찌감치 선도하기 시작한 분야이다. 그런데 한류나 K - POP 등은 게임산업에 비교도 안되게 작은 시장규모임에도 언론의 관심과 칭찬이 엄청난데, 게임은 규제의 대상으로만 본다는 느낌이 강하다. 물론 한류는 단순한 산술적 시장규모 이상의 문화 전파나 홍보 등 간접적 이득이 많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나 그럼에도 게임이 받는 홀대는 과하다.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잘 지적했다고 생각한다. 관련부처 대수술은 타당하고 당연하다. 어떻게 할지를 두고 봐야 판단할 수 있겠다.

'판교-광교-동탄' 융복합 스마트 혁신벨트를 조성과 일산·포천·남양주 등을 비롯한 경기도 곳곳에 미래형 기술개발 및 플랫폼도시를 구축하는 정책도 발표했다. 더불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융복합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도시문제를 해결

-> 누구나 할 수 있는 타당하고 당연한 말. 두고봐야 판단할 수 있겠다.

▲ 정의당 심상정

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에너지저장장치 등 미래산업 분야, 태양광·풍력·스마트 그리드 등 재생 에너지산업 인프라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미래산업 분야 연구개발에 정부투자 지원을 하겠다.

-> 누구나 할 수 있는 타당하고 옳은 말.

제조업 재부흥전략으로 첨단제조업화와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추진한다. 인공지능과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신설하고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미래부·교육부·대학·기업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융합교육(STEM)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추진한다.

이 또한 누구나 할 수 있는 옳은 말인데, 같은 옳은 말이지만 다른 후보들에 비해 균형감이 뛰어나다. 조직설치공약도 홍후보 공약에 비해 합리적이 타당하다. 미래부를 그대로 두겠다는 말도 의외다. 하긴 국민여론이 홍후보가 미래부를 그대로 두면 용납하지 않아도 정의당이 그대로두면 용납할 것이다.

또 대통령 직속 ‘지능정보사회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규제프리존 추진 중단 및 재벌 특혜 중심의 ICT진흥정책 개선, 녹색경제·환경생태산업과 4차산업혁명을 결합을 추진하겠다. 과학기술정책의 혁신을 위해 과학기술계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정책 반영이 보장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 기초원천연구 개발 비중 확대, 자유공모형 상향식 연구비 비중 확대 등을 추진한다.

-> 대통령직속 위원회를 3개 만드는 것인지, 위에 것과 겹쳐서 2개를 만드는 것 인지는 모르겠으나 업무중복이나 혼동의 여지가 있어보인다. 4차산업혁명은 융복합을 많이 언급하는데, 굳이 갈라놓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정의당이니 재벌특혜 이야기를 안하면 섭섭할 수는 있으나 4차산업혁명에서 대기업의 경쟁력은 절대적이라고 생각한다. 특혜만 잡아야지, 선수들을 죽여서는 안된다. 구체적 예산이 없어 아쉽다.

결론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하나 4차산업혁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분위기도 조성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많은 후보들이 새로운 공약을 세우거나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위주로 발표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는것이 규제개혁이다. 지원도 좋고 조직도 좋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고, 진짜 4차산업혁명은 현장에서 뛰는 기업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 기업들이 현실에서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는 규제를 철폐하는 공약이 부족해서 아쉽다. 사실 지금까지 발표된 모든 공약보다 이것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사회의 불공정채용,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민 지 식
취업준비생

현재 채용시장은 불공정한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다는 게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정설과도 같다. 특히 대기업만 바란다는 어른들의 비아냥과는 다르게 좁은 곳이라도 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청년들이 다수라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0월 기준 대한민국의 실업자 수는 92만3천 명을 기록하고 있다. 92만3천 명 중 청년실업자 수는 37만1천 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실업자 수의 약40%를 차지하는 수치이다.¹⁾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실업자 10명 중 4명은 청년실업자라는 얘기이다. 여기서 청년실업자의 연령기준은 15세~29세를 기준으로 잡았기에 현재 취업 시장의 추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또한 있으므로 실제 청년실업자 수는 더 많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중론이다.

이런 취업시장의 현실에 대해 필자는 학벌만능주의/스펙만능주의 때문에 겪었던 일들을 얘기해보고자 한다. 사실 이 얘기는 37만1천명 거의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담담하게 하지만 강하게 얘기해보고자 한다. 우리가 말하는 양질의 일자리의 절대기준은 주로 ‘안정성’이 그 표준에 있다. 필자의 경우 초반에는 학벌과 상관없이 없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위해 공무원 공부를 했다. 부모 따라 자녀도 따라간다고 공무원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필자도 노랑진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높았던 현실의 벽은 넘기가 힘들었고 1년6개월간의 기간이 무색하게 불합격이라는 결과표를 들고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 굉장히 절망적이었다.

1) 2016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렇게 1년 반이라는 공백기가 생기자마자 부랴부랴 취업을 위해 준비를 할 수 밖에 없었다. AFPK라는 금융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 후 CFP라는 금융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도 했었다. 한 자격증을 공부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6개월 정도가 걸렸다. 그만큼 공백기도 길어졌지만 지방4년제 라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스펙이라도 쌓아야만 했었다. 이런 노력을 취업시장에서는 알아주리라는 기대도 했었다. 그러나 결과는 ‘무직백수’라는 타이틀로 돌아왔다.

부족한 학벌을 보완하기 위해 스펙을 쌓을 수 밖에 없고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하면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고 시간이 길어진 만큼 취업공백기도 길어지니 자연스럽게 취업 커트라인에서 멀어져만 갔다. 그리고 어느 덧 나이는 30을 넘기게 됐다. 통계청의 통계에 나온 청년실업자의 연령이 29세까지인 만큼 이제 본인은 청년실업자라는 타이틀 마저도 무색해 질 만큼 ‘잉여인력’으로 전락해 버리게 된 것이다. 이런 현실을 누가 초래했는가? 노력이 노오력이 된 것이다.

많은 정치인들은 공약으로 ‘노력하면 보답받는 사회’를 약속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기업은 채용인원을 점점 줄이고 있고 구직자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구직자들은 바늘구멍과 같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스펙을 쌓고 있고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취업공백기도 비례해 길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취업의 문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져만 가고 있다. 이런 현실에 사회와 정치권과 기업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오늘 나의 이런 현실에 대선을 앞둔 유력정치인들은 본인들이 구원자 인 것처럼 ‘해결해 주겠다’ 라며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10년전에도 있었다. 부디 이번만큼은 이런 현실을 놓고 해안을 내놓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바란다.

스펙프리: 부모, 학벌, 제도에 따른 불공정 채용시스템

백 경 훈

청년이여는미래 대표

| 스펙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경제는 어렵고, 좋은 일자리는 잘 만들어 지지 않는다. 그나마 있는 좋은 일자리에 대한민국의 모든 취준생의 시선이 쏠려있다. 입시, 재수, 편입을 통해 좋은 학교 배지를 달기 위해 노력한다. 졸업유예, 취업유예를 통해서라도 고스펙을 준비한다. 이렇게 시간 들여 노력해도 좋으니 좋은 일자리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언제 가능할지 장담하기도 어렵다. 취업문 앞에 대기표 받고 서 있으면, 뒤에는 역대 최고 스펙 가진 후배 취준생들은 물밀듯이 나온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중간에 낀 오늘의 취준생들은 채용 시스템과 문화에 매우 민감해져있다.

스펙은 필요하다. 자신이 하고자하는 업무를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누구나 노력해 쌓을 수 있는 것이다. 구직자에게는 자신을 차별화 시킬 수 있는 무기이고, 고용주에게는 더 나은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심사 기준이다. 다만 좁은 좋은 일자리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 대다수가 비슷한 스펙, 때론 무의미한 스펙을 무분별하게 쌓는 일련의 상황은 분명 문제다. 그리고 노력으로 얻은 스펙이 아닌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채용시스템에 의한 스펙은 공정채용을 좀 먹는 요소이다. 본 발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스펙은 후자의 성격이다.

| 무의미한 스펙 쌓기는 문제다

무의미한 스펙 쌓기는 취준생들의 졸업유예, 취직유예로 이어지고, 노동시장 진입까지 미루게 한다. 이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게 하고, 나라의 잠재 성장률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스펙초월, 능력 중심 채용 문화 확산은 시대적 흐름이기도 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중점 과제이기도 했다. 공공부문에서부터 NCS(직무표준능력)라는 통일된 직무관리의 틀을 제시하며, 능력 중심 채용 문화를 선도하고자 하였다. 이 노력에 경영계도 응답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능력중심의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을 위한 경영계 권고’(’16. 11.16)를 통해 최근 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역량면접을 실시하는 등 대부분이 자율적으로 확대해가는 추세라고 했다.

[능력중심의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을 위한 경영계 권고 주요내용]

① 스펙보다 직무능력중심 공정채용	②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동등기회 부여
③ 사전 채용절차, 기준 등 명확히 고지	④ 직무수행 무관 정보요구 자제
⑤ 고용세습 등 공정경쟁 저해 사례 근절	⑥ 능력과 성과중심 기업문화 확산

하지만 현장의 이야기는 달랐다. 취업준비의 현장에서 NCS는 또 하나의 스펙으로 불리는데, 취업준생들에게는 이중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했고, 민간 기업으로의 확산은 여전한 과제로 남아있었다.

기업과 구직자간 정보의 불균형도 스펙 쌓기를 부추기는 면이 있다. 아래는 취업포털 사람인에서 진행한 불공정 채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2011년, 2016년)이다. 5년 전이나 후나 구직자들은 여전히 채용시장이 불공정하다고 느꼈고, 그 내용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근무조건 기재가 불분명함’, ‘명확한 평가기준이 없어서’, ‘신상 등 취업과 관계없는 것을 물어서’, ‘채용 심사기준 공개’와 같은 항목을 보면 기업과 구직자 간에 정보 불균형은 여전히 도드라지게 나타났다.

2011년 취업포털 사람인 설문조사	2016년 취업포털 사람인 설문조사
“불공정하다” 75.9% 취업포털 사람인이 구직자 3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5.9%가 채용 과정에서 불공정하다고 느낀 적이 있	“불공정하다” 76.6% 취업포털 사람인이 구직자 534명을 대상으로 ‘채용이 불공정하다고 느낀 경험’을 조사한 결과 75.9%가 ‘있

다고 답했다.	다'고 답했다.
“왜 불공정하다 느끼나” ①지원자격에 부당한 제한 항목이 많아서(41.9%) ②명확한 평가기준이 없어서(37.5%) ③합격 내정자가 있다는 소문이 많아서 (34.5%) ④신상 등 취업과 관계없는 것을 물어서(25.1%) ...	“왜 불공정하다 느끼나” ①내정자가 있는 듯 한 채용공고를 봄(44.3%) ①근무조건 기재가 불분명함(44.3%) ③면접에서 특정 지원자에게만 질문 몰림(36.4%) ④나보다 스펙이 낮은 사람이 합격함(25.9%) ...
“공정채용을 위해 필요한 것” ①열린 채용 확대(59.7%) ②심사기준 및 과정 공개(49.7%) ③블라인드 면접 도입(37.8%) ...	“공정채용을 위해 필요한 것” ①채용 심사기준 공개(19.1%) ②블라인드 채용 도입(17%) ③열린 채용 시행(15.4%) ...

기업에서는 여전히 구직자들의 가족사항을 비롯해 재산, 종교, SNS 계정까지 요구 (2017.04.06. 한겨레21 “‘아버지 뭐하시노?’ 흡수저 가리는 기업 입사지원서” 기사)하지만 반대로 구직자들은 기업의 정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기업에 필요한 스펙과 업무가 무엇인지 모르는 정보의 불균형은 구직자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결국 과도한 스펙경쟁을 부추기는 것이다. 가족사항, 재산, 종교 등에 대한 정보는 구직자들의 노력이나 능력과는 관계없는 부분이나, 차별요소로도 활용될 수 있다.

능력 중심 채용 문화가 현장에 정착되기에는 아직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 딱 맞는 구체적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능력 중심 채용이라는 방향 자체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에 대해 대선주자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고,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국가 주도적 거시적 방향제시 속에 현장에 기반 한 대안과 정책을 녹여주기를 바랄 뿐이다.

참고로 제 3의 영역에서 정보의 불균형이 해소되는 경우도 있다. ‘잡플래닛’이라는 사이트에 가면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기업의 정보를 직장인들이 직접 남긴 후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적 시스템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변화가 어렵다면, 이런 민간 영역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줘도 기업과 구직자간 정보의 균형 추를 맞추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스펙은 문제다

여전히 부모스펙, 지인스펙을 통한 취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청년들은 이리려고 스펙 준비하는지 자괴감이 든다.

최근 정유라씨의 입학, 승마지원 특혜에 분노하지 않은 청년들이 없다. 박근혜 정부 최고 실세로 불린 최경환 의원도 지인 특혜 채용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최 의원은 2016년 1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새로운 진술이 나오며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유력 대선 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 특혜 채용 논란은 10년 째 이어지고 있다. 문 전 대표 측은 의혹은 충분히 해소되었다는 입장이나, 논란은 진행 중이고 최근 문 캠프 대변인의 “(문재인 아들 귀걸이 이력서)요즘 젊은이들 다 그래” 발언은 청년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강성노조의 고용세습은 부모스펙으로 취직하는 가장 확실한 사례이다. '고용세습' 논란이 수면위로 또 오른 것은 2011년 현대자동차 노조의 단체협약 요구안에 '신규채용 시 정년 퇴직자 및 장기근속자 자녀에 대해 채용규정상 적합한 경우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 밝혀지면서부터다. 이를 제한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국회에서 수년째 나서고 있지만, 고용세습은 많은 사업장의 단체협약 안에 여전히 남아 진행 중이다. 최근 정규직을 돈 주고 팔았다는 한국GM 노조의 채용비리는 청년들에게 더 할 나위 없이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불합리한 고용세습과 특혜채용도 문제지만 부모소득과 학력에 따라 자녀들의 일자리가 달라진다는 통계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일자리가 부모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아래 표를 보면 가구소득에 따라 토익점수, 어학연수 참가비율, 인턴 경험자 비율 등에서 고소득 가구 출신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또한 스펙 쌓기를 위한 휴학 경험자 비율이 크게 높다는 점이 특징이다.

[가구소득 수준별 4년제 대학 졸업생의 스펙 쌓기 실태]

	졸업평점 (4.5점 만점)	토익점수 (990점 만점)	어학연수 참가 비율	자격증 취득자 비율	취득 자격증 수	인턴 경험자 비율	기업 자체 운영 인턴제 참여자 비율	휴학 경험자 비율
200만원 미만 ¹⁾	3.60점	750점	15.7%	63.7%	2.1개	14.7%	37.1%	12.6%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62점	757점	19.7%	62.6%	2.0개	12.5%	34.1%	17.8%
500만원 이상	3.63점	817점	31.4%	64.7%	1.9개	18.1%	48.0%	2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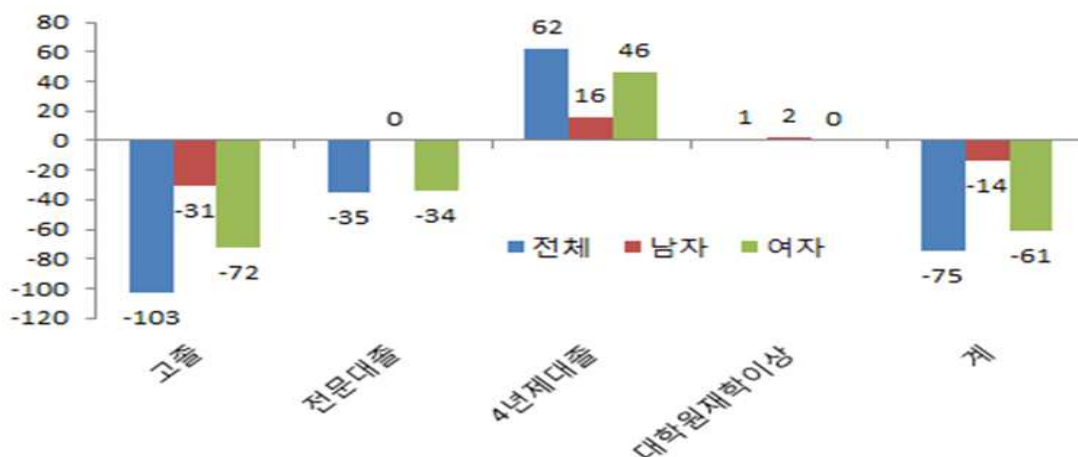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휴학과 휴학을 통한 졸업유예가 가능한 것은 부모의 경제적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스펙, 취업률, 괜찮은 일자리(대기업, 공공기관 등) 취업, 월 평균 임금을 규정짓는 요소가 된다. 특히 졸업유예자가 일반졸업자보다 괜찮은 일자리에 취직하는 비율이 확실히 높다는 통계는 이를 뒷받침 해준다. 부모소득이 높을수록 괜찮은 일자리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 학력만능은 여전하다

아래 그래프의 '4년제대졸'과 '고졸'의 선망일자리 종사 비율을 보면 학력에 따른 차이를 확실히 확인해볼 수 있다. 예년에 비해 대학 입학 비율은 줄고 학력에 따른 사회적 차별은 완화되었다지만 학력이 선망일자리로 연결됨을 통계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임금과 일자리 계층을 구분해버리는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해볼 수 있다.

[2005~2014년간 청년층의 학력별 선망일자리 종사자 수의 증감]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오호영 2014)

일자리 자체가 많지 않다보니 부모 경제력과 학력이 확연하게 일자리를 얻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론 부모 경제력과 학력에 따른 일정정도의 차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다만 적어도 사회에 첫 발을 딛는 청년들에게 계층을 가르는 장벽이 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절하고 관리해 가야 한다는 것이다. 편견과 격차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다.

| 청년이 바라는 스펙프리

스펙과 학벌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하고자하는 업무를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스펙과 학력은 누구나 노력해 쌓을 수 있는 것이다. 구직자에게는 자신을 차별화 시킬 수 있는 무기이고, 고용주에게는 더 나은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심사 기준이다.

다만 좁은 좋은 일자리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 대다수가 비슷한 스펙, 때론 무의미한 스펙을 무분별하게 쌓는 일련의 상황은 분명 문제라는 것이다. 그리고 노력으로 얻은 스펙이 아닌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채용시스템에 의한 스펙은 반드시 없여져야 할 것이다.

결국 청년들이 특정스펙이 아니어도, 노력한 만큼 결과를 보장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정한 일자리 시장이 되어야 한다. 노력한 만큼 좋은 일자리에 높은 임금도 받을 수 있고, 계층 이동도 얼마든지 가능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근본적으로는 경직된 노동시장에서부터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좋은 일자리는 이미 삼촌, 형님들이 자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몇 개 안되는 남은 일자리 차지하기 위해 청년들은 졸업유예, 취업유예 해가며 스펙만 쌓고 있는 것이다. 준비만 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취직문 자체가 열려야 일자리 선순환도 가능한 일이 된다.

기성세대의 양보가 필요한 이런 불편한 이야기들을 대선주자들은 잘 하지 않는다. 대신 무얼 더 줄까 하는 허세 공약만 내세운다. 공무원 늘리기, 중소기업 임금 지원, 비정규직 총

량제, 민간기업 청년고용의무제 등 임시방편적이고 희망 고문하는 정책만 가득하다. 일자리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의 흐름 안에서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진다. 인위적으로 만든 일자리는 나라와 기업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버텨낼 재간이 없다. 대기업과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중국 등 해외 기업과의 경쟁력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청년 일자리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준비하면 다 잘 될 것처럼 유도하는 정책, 모든 일자리를 고임금에 정년보장 된 좋은 일자리로 만들겠다는 실현 불가능한 정책보다 오늘 당장 취직해야 하는 청년들에게는 현실 일자리가 필요하다. 일자리를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로만 나누지 말아야 한다. 다양한 고용계약과 근로형태가 있는 일자리 시장,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고, 노력 한만큼 보장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일자리 시장을 설계하는 것만큼 대선주자들에게 중요하고 절실한 청년·일자리 정책도 없다.

청년배당은 정의로운가?

조 창 덕

성남시 거주 대학생

청년배당은 매분기 시작 월 20일에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24세 청년에게 25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수령하는 특정 조건이 전혀 없으며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24세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총 4번해서 100만원을 수령하게 되며,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받는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영세 상점가에서 현금과 같이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으로, 구매자는 상품권 액면의 6%를 할인 받아 구매할 수 있으며, 상품권을 받은 가맹점의 경우 카드수수료를 절감 받는 혜택이 있다.

‘배당(配當)’이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유 지분에 따라 기업이 이윤을 분배하는 것’²⁾이다. 반면 ‘수당(手當)’은 ‘일정한 급료 이외에 정기 또는 수시로 지급되는 보수’³⁾이다. 배당의 경우 청년들로 하여금 원래 받아야 할 자신의 몫을 받는 듯한 기분을 들게 한다. 추측하건대, 청년수당이 아닌 배당이라는 용어선택의 배경에는 이재명성남시장이 청년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듯 청년배당의 취지는 참으로 정의롭다. 다만, 청년배당은 ‘과연 청년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맞닥뜨린다.

필자의 경험과 주변 지인들의 청년배당 수령 사례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가계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다. 필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가계생활에 보탬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는 청년배당이 처음 시작했을 적에 많은 청년들은 성남

2) 네이버 지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99719&cid=40942&categoryId=31914>)

3) 네이버 지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15139&cid=40942&categoryId=31847>)

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알지 못하였다. 더군다나 편의점, 백화점, 대규모 체인점에 익숙한 청년들은 전통시장과 영세 상점가와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었다. 두 번째는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인데, 술과 담배 같은 기호식품을 산다거나 인터넷에서 현금화하여 사용한 경우이다. 현금화는 생각보다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청년배당 지급일인 분기별 20일에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내 성남사랑상품권 매입 글이 많이 올라오며, 굳이 지급일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성남사랑상품권 매입을 원하는 사람들과 접촉이 가능하다. 이러한 청년배당 사용처가 과연 청년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것일까?

‘청년들의 미래를 지원합니다’라는 청년배당의 슬로건이 무색하게 성남사랑상품권이 어떻게 미래를 지원해주는 것이며, 배당 지급 이후에는 사용처가 적절했는지, 개선점이 필요한지 등의 정책피드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필자의 지인 중 한명은 4분기까지 100만원을 다 수령 받고, 이후 5분기에도 청년배당 신청서가 와서 25만원을 더 수령했다. 이렇듯 체계적인 절차도 완성되지 않은 청년배당은 심도 있게 고심해보아야 할 정책이다. 중앙정부가 이를 통제한다는 식으로 피아를 구분하여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다.

포괄적인 복지의 프레임으로 본다면, 어찌됐든 청년들에게 100만원의 상품권을 주어 가계에 도움이 되고 또한 청년들 역시 현금화를 통해 본인이 낸(혹은 가족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취지에서는 이해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며, 우리 사회의 여러 계층에서 ‘헬조선’이라는 용어가 널리 쓰일 정도로 모든 세대가 다양한 고통을 지고 있다. 이러한 청년배당이 다른 세대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보았을 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되었는지가 의문스러우며 우리 사회의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 계층, 직업들은 없는 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정의로운 목적에 함몰되어 정작 중요한 사업의 효율성, 실질적인 효과 등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청년수당·아동수당 등 대선주자별 수당 공약

김 순 옥

청년이만드는세상 공동대표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로 예정보다 1년 가까이 먼저 대선 정국을 맞이하게 되었고 유권자의 표심을 사기 위해 다양한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후보들의 공약들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평소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후보조차 공약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올 정도이다.

짧은 선거 기간 때문인지 각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장기적이고 생산적이기 보다는 단숨에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선심성 공약들이 많다. 선심성 공약이 몰리는 복지 분야 공약만 보면 어느 정당 후보의 공약인지 헷갈릴 정도이다. 가장 보수적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출산 수당(둘째 출산 시 1000만원 지원) 공약은 정말 이 공약이 보수정당에서 나온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높은 5060의 표심을 잡기 위한 기초연금 공약은 5명 후보 모두 대동소이하다. 특히 이번 선거는 지역 보다 ‘세대별 대결’이 전망되어서인지 노인, 청년, 아동으로 대상을 특정한 세대별 공약에 공들이는 것 같다. 수당 공약만 봐도 알 수 있다.

후보	공약	소요 비용 추계	재원조달방안
문재인 후보	청년구직촉진수당	연평균 5400억 원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 확대를 통해 조달
	아동수당(0~5세 월10만원)	연평균 2조6000억 원	
홍준표 후보	영유아 대상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	-	유사·중복사업 조정 및 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재원 마련
	둘째 출산 시 1000만원, 셋째는 교육비까지 지원	-	

안철수 후보	청년수당(구직자 6개월간 180만원, 중기 취업 2년간 1200만원)	-	매년 17조에 달하는 일자리 관련 예산을 조정해 총당
	아동수당(소득하위 80% 만 0세~11세 월 10만원)	-	재정지출 합리화 및 세출 조정, 건강보험·고용보험 재정으로 조달
유승민 후보	실업수당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	-	불필요한 재정지출 절감과 중부담-중복지 합의에 의한 재원 확보
	가정양육수당 2배로 인상 아동수당(초등~고등학생 자녀에 1인당 월 10만원 지원)	-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
심상정 후보	모든 아동에게 10만원 아동수당 도입	-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 증세
	대학생주거수당(기숙사 미배정 대상에게 월 20만원 지급)	-	

<표1 주요 대선후보들의 청년관련 수당 공약>

후보들의 각종 수당 공약에는 ‘조’단위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비용 추계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명확히 밝힌 후보는 안타깝게도 없다. 모두 두루뭉술하게만 이야기 하고 있다. 그나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 각 사업마다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적시하였지만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들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이 공약들은 결국 예전에도 그랬듯 空約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후보자들이 마치 경쟁하듯 수당 공약을 내는 이유는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 높아져 가는 실업률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 취업, 삶의 기회 등에 불평등을 느끼는 국민들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것 일거다. 수당 정책에 대해 모든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정책들에 크게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후보자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수당’은 단기 처방은 될 수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끓아가는 상처에 제대로 된 치료 없이 반창고만 붙인 꼴로 결국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청년들에게는 수당보다는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양육 수당보다는 아이들을 제대로 된 환경에서 키울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복지 정책은 한 번 도입이 되면 폐지하기 어렵고 지속적으로 재원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그 어느 정책보다 신중해야 한다. 또한 자칫하면 갈등을 불러 올 수 있는 만큼 후보들은 이런 공약보다는 실제 이행이 가능하고 합리적인 공약으로 현재 공약을 수정해야 하고 유권자들은 사탕발림과 같은 공약에 넘어가지 말고, 꼼꼼하게 따져본 후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illegible]

[illegible]



서울시 중구 통일로 86, 612호(순화동, 바비엥3차)

Tel : 02-741-7660~2

Fax : 02-741-7663